

〈2024. 4. 23. ~ 4. 30. / 프랑스〉

행정자치위원회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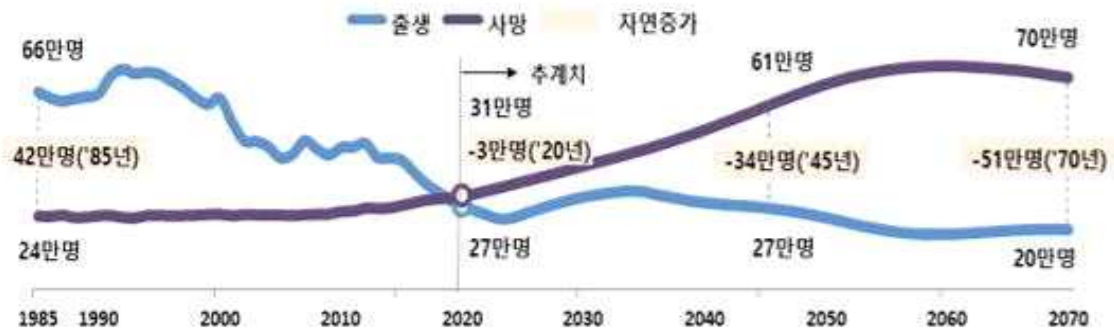
I. 연 수 개 요 .....	1
II. 연수 국가 연구 - 프랑스(FRANCE) .....	8
III. 방 문 기 관 .....	17
① 파리 국제 대학촌 .....	17
② 국제이주기구 .....	21
③ 이민자 사회복지 및 가족정책 서비스 협회 .....	26
④ 리옹 지역 가족 협회 연합 .....	30
⑤ 메트로폴 리옹 까레 드 수아 신도시 .....	33
IV. 시 사 점 .....	36
V. 정책제안 간담 .....	43
VI. 관련 보도자료 .....	46

# I

## 연수개요

### □ 연수동기 및 배경

- 한국은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및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함
  - 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
  - 출산연령 증가 등으로 합계출산율은 더 줄어 저출산 해소에 어려움 예상
    - 국내 : 1980년대(2.82명), 2002년(1.18명), 2022년(0.78명), 2023년(0.72명)
    - 전북 : 1980년대(2.90명), 2002년(1.27명), 2022년(0.81명), 2023년(0.82명)
    - \* 프랑스 : 1980년대(1.95명), 1993년(1.66명), 2010년(2.02명). 최근(1.8명)
  - 2020년을 기점으로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Dead Cross 현상



자료: 통계청(2021)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그림 1] 출생아수 및 사망자수, 1985~2070년

-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됨
  -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의존성이 구조화 됨.
    - 국내 15~64세 생산가능 인구는 전년보다 25만 8000명(0.7%) 줄어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외국인은 175만 2000명으로 전년보다 10만 2000명(6.2%) 늘어남.(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 시, 김관영 지사가 '지방 정부도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구의 10% 범위 내에서 비자발급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고 건의('23.7월)

- 인구위기에 따른 중앙과 지역의 불균형,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 서울·수도권은 전체 국토의 11.8%를 차지하면서 인구의 절반이 정주
  - 행안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중 소멸위험지역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9.29%)으로 전체 14개 시군구 중 13곳이 소멸위험지역임.
    - \* 강원(88.9%), 경북(87.0%), 전남(81.8%), 충남(80.%) 등도 시군의 80% 이상이 소멸위험지역
    - \*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매년 1조원씩 10년간 10조원을 투입 예정임.
  -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을 주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
    -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3.1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23.7.1.)

## □ 연수 개요

- 연수기간 : 2024. 4. 23. ~ 4. 30. / 6박 8일
- 연 수 국 : 프랑스
- 연수대상 : 14명
  - 의 원(6)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6명
  - 직 원(8) : 전문위원실 직원 3명, 집행부 5명
- 연수주제 : 인구감소 대응 및 이민·외국인 정책 선진사례 견학

## □ 연수내용

### 1) 오랜 역사를 지닌 프랑스 이민·외국인 정책 선진사례 습득

- UN시스템의 일부로, 이주민의 재정착 및 이동 지원, 취약한 이민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이민 및 국경관리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제기구인 국제이주기구(IOM)의 프랑스 지부 방문
  - 국제이주기구의 역할 및 현 추진과제를 청취하여, 이민·외국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 방향 제안
- 프랑스 대표 사회적 기업인 Groupe SOS Solidarites 소속 민간단체로 이민·외국인 사회통합 관련 공공 및 민간 주체 교육, 이민자 권리 보장 및 대민 홍보, 이민·외국인 개별 행정 지원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민자 사회복지 및 가족정책 서비스 협회 (ASSFAM)를 방문
  - 이민·외국인 유입지원→정착지원→사회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지역민과 이주민의 공존과 협력을 위한 각종 정책사례 청취 및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 도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 방향 연구
- 파리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기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20년 설립된 세계최초의 국제 대학 기숙사촌인 파리 국제 기숙사촌 방문
  -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유학생 복지를 위한 프랑스의 외국인의 유학생 정책 및 유학생에 대한 정주여건 제공 등이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 우리 도 정책 방향 연구

## 2) 저출산·보육 및 비혼출산 정책 등 인구정책 사례조사

○ 국가 가족협회 연합인 UNAF 산하의 리옹 지역의 가족협회 연합으로 프랑스 가족정책의 모든 영역에서 공공기관의 조력자 역할을 하며, 가족 중재, 육아 휴가, 아동 수당, 가족 돌봄을 위한 휴가 등을 지원하고 리옹 지역의 출산율 관련 정책을 연구, 미혼모 및 비혼 출산 등에 대한 지원 활동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 가족들을 위한 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연합인 리옹 지역 가족협회 연합(UDAF) 방문

- 미혼모 및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 유형 속에서 출산과 양육, 일상생활 지원 등 단체의 활동과 정부의 지원정책이 출산율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우리 도 인구정책 방향에 접목

## 3) 균형발전과 도시재생으로 지역 인구감소 대응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 자치분권 강화(메트로폴)로 지방의 쇠퇴와 지역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한 도시재생 정책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의사결정과 사업을 추진 중인 리옹시를 방문하여 신도시 조성 사례(까레 드 수아) 청취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3. 7. 10.)으로 지역의 자율성이 확대된 가운데 균형발전 및 도시재생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리옹의 사례를 통해 우리 도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모색

## □ 기대효과

- 2030년 국내 체류 외국인이 300만명을 넘을 전망이고, 정부의 이민청 설립 및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체계를 개편하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줄어들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문제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현 외국인 정책을 진단
- 프랑스의 외국인 유입지원→정착지원→사회통합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민과 이주민의 공존·협력으로 함께 성장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청사진 제시
-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과 인구 증가현황 및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인구소멸 위기대응 및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

## □ 연수자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비 고
계			14명	남12/여2	
행정자치위원회 (6명)		위원장	김 이 재	여	
		부위원장	강 태 창	남	
		위 원	김 정 수	"	
		"	염 영 선	"	
		"	김 성 수	"	
		"	오 현 숙	여	
행정자치 전문위원실 (3명)		전문위원	김 동 희	남	
		주무관	김 형 완	"	
		주무관	안 성 호	"	
집행부 (5명)	대외협력과	주무관	변 재 선	남	
	교육협력추진단	주무관	윤 동 일	"	
	정책기획관	주무관	유 성 석	"	
	청년정책과	주무관	정 후 락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김 동 영	"	

## □ 연수일정

일자	방문지역	공식일정	비고
4.23. (화)	전주 인천 ⇒ 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00) 도의회 집결 후 출발</li> <li>○ (08:10) 인천 국제공항 제2터미널 도착 후 출국수속</li> <li>○ (11:10) 인천 국제공항 출발 → 파리 공항</li> <li>○ (18:30) 파리 공항 도착</li> <li>○ (20:00) 석식 후 호텔 이동 및 휴식</li> </ul>	1일차 (파 리)
4.24. (수)	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30) ① 프랑스 파리 국제 대학촌(CITE) -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촌 운영 현황 청취 및 한국관 시찰 등</li> <li>○ (15:00) ② 국제이주기구(IOM FRANCE) - 국제 이주 기구의 역할 및 현 추진과제 등 청취</li> </ul>	2일차 (파 리)
4.25. (목)	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③ 이민자 사회복지 및 가족정책 서비스 협회(ASSFAM) -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각종 지원 사례 청취</li> </ul>	3일차 (파 리)
4.26. (금)	파리 ⇒ 리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00 ~ 11:30) 파리 → 리옹 이동 (교통편 : T.G.V)</li> <li>○ (15:00) ④ 리옹 지역 가족협회 연합(UDAF) - 지역의 출산율 제고 정책 및 비혼 출산 등 경험자 인터뷰</li> </ul>	4일차 (리 옹)
4.27. (토)	리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시찰방문 및 휴식)</li> </ul>	5일차 (리 옹)
4.28. (일)	리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시찰방문 및 휴식)</li> </ul>	6일차 (리 옹)
4.29. (월)	리옹 파리공항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00) ⑤ 메트로폴 리옹 까레 드 수아 신도시 - 까레 드 수아 신도시 조성 사업으로 인구감소 대응 사례 청취</li> <li>○ (14:00~16:00) 리옹 → 파리 이동 (교통편 : T.G.V)</li> <li>○ (21:00) 파리 국제공항 출발</li> </ul>	7일차 (기 내)
4.30. (화)	인천 ⇒ 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55) 인천 국제공항 도착</li> <li>○ (20:30) 전주 도착 및 해산</li> </ul>	8일차

## 1 이민자 유입 및 통합을 위한 정책의 변화와 흐름

## ① 프랑스 외국인 및 이민자 유입 배경

- 프랑스는 19세기 이후 전통적으로 이민을 장려해 온 유럽에서 이민자 도입의 역사가 가장 긴 국가로서 그 배경에는 산업화, 출생률 저하, 노동력 부족 등의 이유가 있음.
- (1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 중심의 대규모 이민을 유치한 시기
- (2기) 1930~70년대는 전후 재건과 전후 경제 호황기에 발생하는 노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유입 시기. 1946년에는 체계적인 이민을 위해 '이민국'을 설립하기도 하였으며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 모로코 등지에서 대규모 이민도 이루어진 시기. 이들은 종교적, 문화적, 인종적 측면에서 프랑스인들과 다른 배경을 지니고 있어 프랑스에 동화되기가 용이하지 않았음.
- (3기) 1974년 이후 이민에 대한 프랑스인들과 프랑스 정부의 입장 변화 시기로, 프랑스의 경기가 석유파동으로 인해 둔화되면서 합법적 노동 이민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음. 경기 둔화와 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프랑스 정부는 1974년 고숙련 노동자와 계절노동자를 제외한 노동이민을 공식적으로 중단하지만 가족재결합 이민과 1980년대 사회당 정부의 장기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영주권 부여로 이민자는 여전히 증가함.
- (4기) 최근의 이민자 정책은 2005년 10월 파리 외곽에서 발생한 이주민 2세들의 소요사태로 인해 프랑스식 동화주의 모델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짐. 2006년 이민통합법을 개정하여 '받아들이는' 이민에서 '선택적 이민'으로 개편을 단행. 이러한 입법의 목적은 프랑스 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 이민자들을 선별하여 이민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데 있음.

## ② 프랑스 외국인 및 이민자 현황

- 프랑스에서 이민자와 외국인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현재 프랑스 총 인구는 약 6천7백만명으로 이 중 이민자는 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3%에 달함. 이민자 중 250만명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며, 450만명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이민자임.

<연도별 이민자 수의 비율>

연도	이민자 수(천명)	총 인구 중 비중(%)
1926	2,288	5.7
1931	2,729	6.6
1936	2,326	5.6
1946	1,986	5.0
1954	2,293	5.4
1962	2,861	6.2
1968	3,238	6.5
1975	3,887	7.4
1982	4,037	7.4
1990	4,222	7.3
1999	4,374	7.3
2006	5,136	8.1
2010	5,514	8.5
2015	6,169	9.3
2020	6,848	10.2
2023	6,964	10.3

- 1920년대 이후 프랑스에서 외국인과 이민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1970년대 중반까지 이민자들은 전후 재건을 위한 남성 위주의 노동 이민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74년 프랑스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노동 이민이 감소하고 가족 이민이 이루어졌으며, 여성 이민이 증가함.

## 2

## 인구감소에 따른 저출산 및 보육 대책

- 프랑스 합계출산율은 1980년대 1.95명이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1993년 1.66명으로 최하점을 기록. 그 이후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2.02명을 달성하였고, 최근에는 1.8명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프랑스의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 OECD Family Database, Total Fertility Rat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또한, 프랑스의 가족정책에 대한 재정지출은 국민총생산(GDP)의 3.5%이상으로 OECD 회원국 평균(약 2.3%)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재정지출의 2배 이상의 수치임.
- 프랑스는 19세기 말부터 가족정책을 정치적 의제 중 하나로 다루어왔고, 다양한 가족수당정책을 통해 가족과 모성을 중시하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 가족수당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38년이며, 그 이후 급여수당, 출산 전 수당, 출산 수당 등의 가족 지원이 체계화되었고, 1972년에는 가족수당 업무를 총괄하는 가족수당기금 공단(CNAF)이 설립되기도 함.

- 또한, 프랑스의 출산휴가는 부양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산전휴가의 경우 6~8주, 산후 휴가의 경우 10주~18주를 사용할 수 있었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28일임.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2024년 들어 산후 출산휴가 기간을 6개월로 늘림. \* 부부 모두 해당

**<프랑스의 출산휴가 기간>**

자녀	산전	산후 (기존)	산후 (현재)
첫째 자녀	6주	10주	6개월
둘째 자녀	6주	10주	
셋째 자녀 이상	8주	18주	
쌍둥이 자녀	12주	22주	
세쌍둥이 이상 자녀	24주	22주	

- 프랑스는 비혼출산 관련 정책인 등록 동거혼제도 팩스(PACS : 시민연대계약 또는 공동생활약정) 시행으로 연인이나 커플이 함께 거주하며 아이를 출산해도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이로인해, 프랑스의 비혼출산율은 1998년 41.7%, 2012년 56.7%, 2020년대 들어 62.2%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임. 팩스를 원하는 커플은 이성과 동성의 구분 없이 시청에 팩스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면, 파트너로서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지며, 팩스 기간 동안 동거 커플은 소득세와 부채, 사회보장급여(건강보험, 실업수당 등 파트너까지 포함해 혜택대상에 포함), 휴가권 등 결혼과 동등한 혜택을 받음.

### 3 균형발전과 도시재생으로 지역인구감소 대응

#### ① 프랑스 지방자치 특징 ⇒ 지자체간 연합체 결성의 일반화

○ 프랑스 자치계층 : 3단계

자치계층	명칭	지자체 수	
		프랑스 본토	해외 영토
광역	레종 (Région)	18 개	
		13	5
중역	데파르트망 (Département)	101 개	
		96	5
기초	코뮌 (Commune)	35,461 개	
		35,287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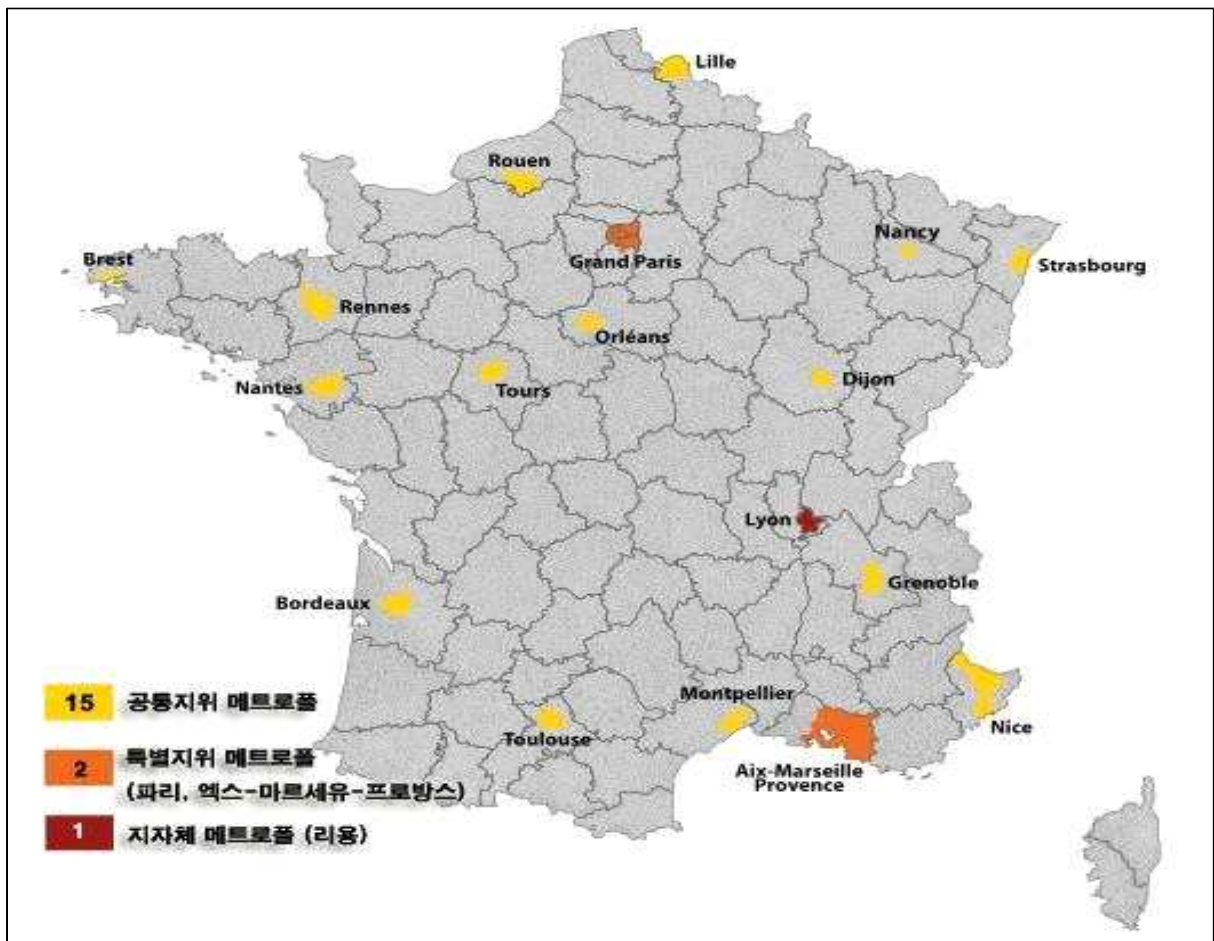
- 자치단체는 코뮌(기초자치단체), 데파르트망(중역자치단체), 레종(광역자치단체)의 3단계로 구분되며, 각 자치단체는 배분된 권한영역 내에서 완전한 자율권을 행사하므로 상·하 주종관계도 없으며 상호간의 지도·감독관계도 존재하지 않음.
- 기초지자체의 지나친 세분화 및 규모 격차가 심각하고 광역행정 서비스 조직의 필요성에 의해 연합체 결성이 일반화됨.
  - 인구 2,000명 미만의 마을 규모 코뮌이 전체의 90%에 달하며, 1%도 되지 않는 100여개의 코뮌만이 인구 5만명 이상임.
- 5가지 유형의 코뮌 연합체가 존재하며 메트로폴이 가장 완성된 형태
  - 인구 규모, 권한위임, 지방세 조세권 유무 등에 따라 크게 5가지로 구분되며(메트로폴, 도시공동체, 광역공동체, 코뮌공동체, 기초지자체 조합) 그중 메트로폴이 권한 및 조세권에서 가장 완성된 형태
- 메트로폴 단위의 도시화 현상이 세계적 추세
  - 인류활동 → 거점도시 집중 현상 보편화
  - 유럽 공동체 기본 지방단위가 대도시로 변모중
  - 국제적 도시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도시 경영을 위해 메트로폴 결성 필요

## ② 메트로폴 설립 근거 및 연혁

- 2010년 메트로폴 설치 관련 최초 법령 제정
    - 인구 50만 이상 도시권 자율의사에 따라 메트로폴 결성
    - 지위 : 자체조세수입권 보유 꼬뮌 연합 공공기구
    - 권한 : 제한적 부여(통학교통서비스, 데파르트망 도로 및 산업단지 운영, 메트로폴 명의 해외홍보 및 경제개발 등 데파르트망 보유한 권한의 일부)
  - 2014년 “지방자치단체 현대화 및 메트로폴 설치” 관련법 제정
    - 인구 40만 이상 꼬뮌 연합체의 메트로폴 설립 의무화
  - 2017년 “파리 지위 및 메트로폴 구성” 관련법 제정
    - 설치 대상 확대 : 인구 40만 이상 꼬뮌연합체(당연설치), 레종(광역)주도 소재한 인구 25만 이상 꼬뮌연합체(설치가능)
    - 파리, 리옹, 마르세유 3대 메트로폴 지위 및 권한 배분 상세화
  - 메트로폴과 국제교류
    - 행정구역 규모로 보아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에 상응하는 경우가 많아 관심가는 소규모 꼬뮌(기초) 규모가 지나치게 작을 경우 메트로폴을 교류 대상으로 추진 가능
    - 거점도시 단체장이 메트로폴 의회 의장을 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메트로폴 의원 역시 회원 지자체의 단체장, 부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메트로폴과의 교류는 지자체 교류에 해당
- ⇒ 메트로폴 + 해당지자체와 동시에 협약체결도 가능
- : 사례) 대구 - 릴 메트로폴 - 릴 시
- 메트로폴 권한영역 중 경제개발, 환경, 문화, 사회복지, 관광개발 등은 많은 지자체가 추구하는 주요 교류 테마에 해당하며, 메트로폴 정부와 직접 협력사업 추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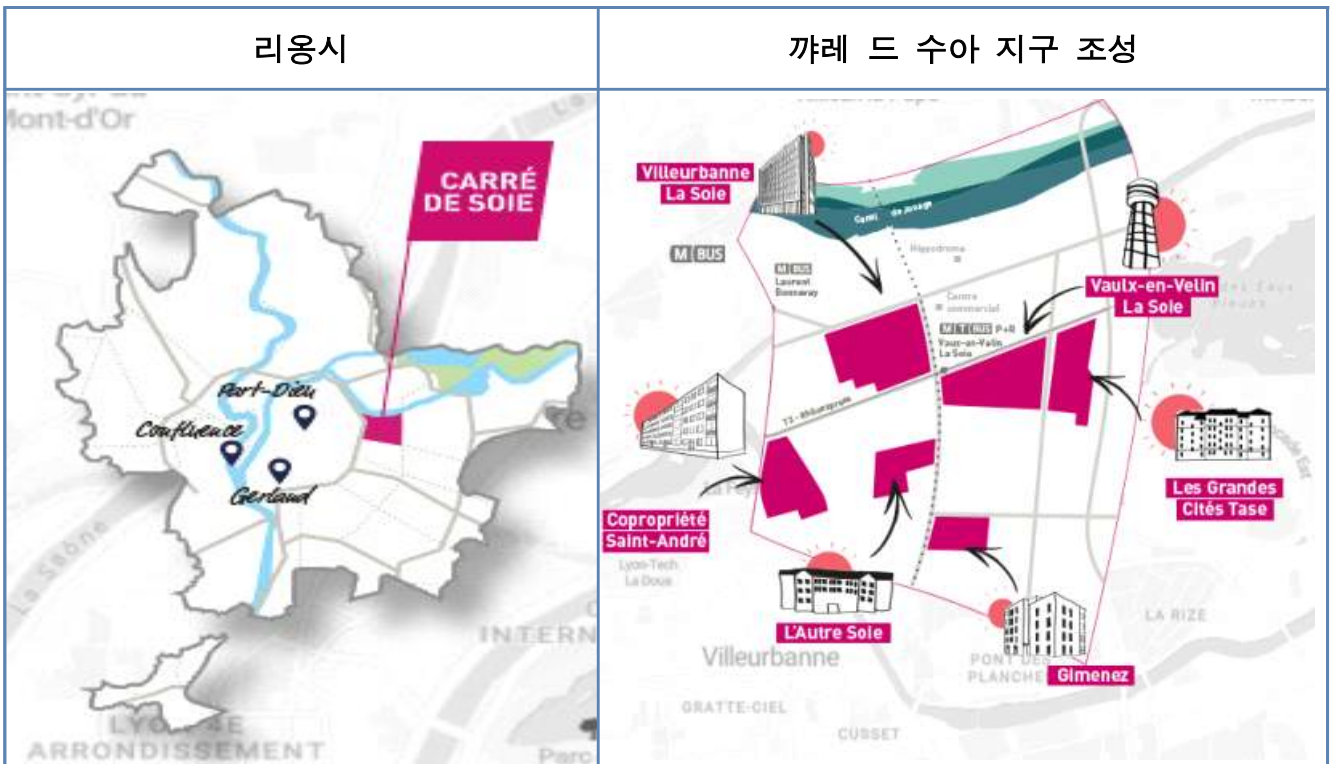
## <설치 연혁>

- ① 2011. 12. 최초의 메트로폴 탄생 - 니스꼬뜨다쥐르 메트로폴
  - 2010년 제정법을 적용한 최초이자 유일한 메트로폴
  - 기존 니스 도시공동체에 인근 꼬뮌공동체 3개 통합으로 결성
- ② 2015. 1. 전국 11개 메트로폴 탄생
  - 리옹 메트로폴 : 론 데파르트망(중역) 대체, 전권 이양(유일한 지자체 지위 메트로폴)
  - 보르도, 브레스트, 그르노블-알프, 릴, 몽펠리에, 낭트, 렌즈, 루앙-노르망디, 스트라스부르, 툴루즈 등 10개 메트로폴은 EPIC 지위
- ③ 2016. 1. 2개 메트로폴 탄생(특별지위)
  - 2014년 법 적용한 프랑스 2대 거대도시
  - 그랑파리 메트로폴 및 엑스-마르세유-프로방스 메트로폴
- ④ 2017년 3개 메트로폴 추가 설립
  - 2017년 법 적용한 인구 40만 미만이나 레종(광역) 수도 도시 중심 결성
  - 뚜르-발드루아르 메트로폴, 오를레앙 메트로폴, 디종 메트로폴



### ③ 리옹 메트로폴 사례

- 본래 메트로폴은 지자체와 달리 위임받은 사무만을 담당하나 리옹 메트로폴은 전권을 이양받아 지자체의 지위를 가짐
  - : 리옹 메트로폴은 리옹시를 포함한 59개 코뮌으로 구성되며, 인구는 약 143만명
- 리옹은 19~20세기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적 수도로 성장하고자 했으나 프랑스의 중앙집권화가 심화되면서 1980년대 인근 그르노블, 툴루즈 등의 도시가 국가 주도의 신산업을 유치하고, 인구 유입이 활발한 연안도시인 니스, 보르도 등에는 정부가 신기술 산업투자를 하며 리옹은 상대적으로 쇠퇴의 길을 걸었음.
- 그러나, 전통적 산업구조(섬유, 화학)를 가진 리옹은 지역의 위기 속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에만 의지하지 않고 경쟁거점산업과 도시 재생을 통해 독자적 도시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 : 리옹 콩플뤼앙스, 손강 수변정비, 리옹 파르-디유 업무지구, 가리발디 거리, 까레 드 수아 지구 등



- 리옹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산업을 통해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까지 대거 유치하고 있음. 리옹은 자체적으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 민간기업과 합작한 도심정비회사를 만들고 실크산업의 중심지였던 수변지구, 이른바 ‘콩플뤼앙스’ 지역의 쇠퇴를 방지하지 않았으며, 리옹 지역의 동부에는 ‘까레 드 수아’ 지구를 조성하여 주거, 상업, 기업, 공공 편의 시설 등을 조성하여 리옹 권역 내에서도 균형을 꾀하였음.

**새로운 주택, 사무실, 공공 장소 및 시설 등**

<p>22,500년 추정 인구 2022명</p>	<p>1,100개 기업과 19,000 명의 직원</p>	<p>+ 2009년에서 2022년 사 이에 3,500채의 주택이 건설되고 1,200채의 주 택이 재건되었습니다.</p>	<p>모두를 위한 새로운 공 공 공간 및 편의 시설</p>	<p>100+ 상점 + 60 개의 레 스토랑과 카페</p>

### Ⅲ

## 방문기관

### 1

## 파리 국제 대학촌 - Cite Internationale

- 방문일정 : 4. 24.(수) 09:30
- 주 소 : 17 Bd Jourdan, 75014 Paris
- 홈페이지 : <http://www.ciup.fr/>
- 면 담 자 : Taebin Han (한태빈 현지 유학생 등)

- 파리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기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20년 설립된 세계 최초의 국제 대학 기숙사촌  
: 파리 국제 대학촌은 현재 140개국에서 온 유학생 1만여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음
- 전 세계 각국의 기숙사가 모여있으며, 2018년 세계 26번째로 한국 관도 건립되어 최신식 기숙사로 인기가 많으며, 반값거주비, 경비원 상주 등 유학생의 만족도와 편의성이 매우 높아 외국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관이며 현재 우리나라 유학생 175명, 외국인 75명 등 총 250명이 머물고 있음.  
: 파리 국제 대학촌은 교류를 촉진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가관별로 다른 나라의 학생 30%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
- 2024년 현재 1인실 기준 기숙사비는 약 월 700유로(100만원)이며, 월세 가격이 높기로 유명한 파리 지역의 최근 원룸 시세 기준 약 월 1,300유로(188만원)에 비하면 절반 가량임.

○ 파리 국제 대학촌 한국관 신청자격 및 기숙사비

<신청대상 및 자격>

○ 파리 국제대학촌 입사와 거주에 관한 규정 적용

- 학생 자격 : 나이 18세 이상, 최소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을 지닌자로서, 프랑스 공·사립 고등교육기관 또는 프랑스 고등교육기관과 협약이 체결된 외국교육기관의 석·박사 학위과정에 등록한 사람
- 연구원 자격 : 박사학위 소지자로 고등교육(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중이거나, 일드프랑스 내 고등교육기관 또는 연구소가 초청한 사람
- 예술인·문화 분야 종사자 자격 : 학위 수료 후 전시회, 공연, 연구프로젝트 등을 위해 일드프랑스 내에 거주하는 예술인 또는 문화 관련 직업 종사자

<기숙사 비용>

(단위:유로)

구분		6개월 이상 거주			6개월 미만 거주		
		학생	연구원	예술인 등	학생	연구원	예술인 등
1인실A(14㎡)	232	635	670	635	690	725	690
1인실B(20㎡)	6	700	735	640	755	790	755
스튜디오(28㎡)	8	855	890	855	910	945	910
가족실A(40㎡)	2	1,185	1,220	1,185	1,240	1,275	1,240
가족실B(56㎡)	2	1,405	1,440	1,405	1,460	1,495	1,460

## □ 주요 면담내용

### ☞ 파리 국제 대학촌의 역사와 설립 목적은 무엇인지?

- 1920년대 프랑스 교육부 장관과 파리 대학부장이 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고, 파리 학생들의 주거 환경이 열악해 시작되었으며 3번의 확장사업이 있었음.
- 첫 번째로 2차 세계대전 직전 건축물의 특징은 지역주의와 전통주의에 기반한 건축양식을 통해 국가관이 드러나는 건축
- 두 번째로 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적인 양식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건축
- 세 번째로는 한국관처럼 친환경적인 요소를 담은 건축  
: 한국관은 2세대 기숙사가 건립된 이후 최초로 건립된 국가관임

### ☞ 한국 유학생들이 모두 한국관에 기거하는지?

- 국가관별로 다른 나라의 학생 30%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에 의해 본인도 아프리카관에 거주하고 있음. 다른 국가 학생들과 교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학생 모두 만족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함.

### ☞ 한국관의 운영 주체와 한달 비용 및 지원액은?

- 한국관의 경우 프랑스 유학생의 거주 여건을 개선하고 거주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250억의 예산을 공동 부담하고 파리 국제 대학촌이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파리 국제 대학촌 한국관 공익재단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음.
- 학생 및 입사 형태에 따라 비용이 각기 다르며, 다양한 장학제도들이 있어 실제 입사공고에 있는 기숙사 비용보다 저렴함.

### ☞ 프랑스 및 파리에 한국 유학생은 얼마나 되며 이 시설들이 유학생 유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 프랑스 학생 비자를 발급받아 유학오는 학생들이 5,000명 정도 되며, 파리에 절반 이상 유학하고 있음.
- 다른 국가 학생들과의 교류가 용이하며, 프랑스 시내의 생활비와 거주비를 감안했을 때, 대학촌의 장점이 매우 많다고 생각함.
- 식당의 경우 식권은 3.3유로, 장학생 및 저소득층 학생은 1유로

## □ 방문 결과

- 오늘날 파리 국제 대학촌은 학생들의 정주여건 뿐만 아니라 시대별 역사가 반영되어 국가 간 화합과 국가별 필요에 의해 독창성을 가지고 추진됨.
- 12,000여명의 학생이 거주하며, 27개의 국가관과 43개의 기숙사 동이 있으며 국가관 외에도 후원단체 및 지자체를 대표하는 기숙사도 있음.
- 국가별 기숙사에 정원의 30% 이상은 다른 국가 학생으로 배정하여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과 교류 촉진으로 다문화 이해 강점이 있음.
- 코로나 팬데믹 및 물가 상승등의 요인으로 기숙사 건립 초기보다는 비용이 올랐으나 파리에 위치한 아파트나 다른 주거시설에 비해 반값은 아니더라도 70% 수준의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 가능.

▶ 외국인 이민과 다양한 국가의 난민들이 많은 프랑스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및 전북도의 경우 주로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출신의 유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중 하나로 외국인 유학생 유지와 정착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각 대학 그리고 유학생 출신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거점지역에 기숙사 건립 방향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 방문 사진



현장견학



단체 사진

## 2 국제 이주 기구 - IOM FRANCE

- 방문일정 : 4. 24.(수) 15:00
- 주 소 : 31 rue du Faubourg Poissonnière
- 홈페이지 : <https://france.iom.int/>
- 면 담 자 : Sara Abbas (국장)

- 유럽 내 이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1951년 처음 설립돼 직업, 교육, 자유 등 다양한 이유로 증가하는 이주민을 지원하는 국제 조직으로 성장
  - 정부간 국제 기구이자 유엔 시스템의 일부로 이주민의 재정착 및 이동 지원, 취약한 이민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이민 및 국경관리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제기구인 IOM의 프랑스 지부
- :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며 175개 회원국, 100개 이상의 국가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1988년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



- 2024년 2월 에이미 포프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총장은 IOM의 협력국인 한국을 방문해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더 많은 이주자를 필요로 할 것이며, 이주자들이 한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게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라며 “이주는 국가의 경제와 혁신,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고 언급함.
- 유럽과 아시아는 각각 약 8,700만 명과 8,600만 명의 국제 이주민을 수용했으며, 이는 전 세계 국제 이주민의 61%를 차지함.



- 국제 이주는 전 세계적으로 균일하지 않고 경제적, 지리적, 인구 통계학적 및 기타 요인에 의해 형성되어 다양한 통로를 나타내며 가장 큰 통로는 개발 도상국에서 미국, 프랑스, 러시아 연방, 아랍에미리트 연합 및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더 큰 경제국으로 향함.

- IOM 프랑스 대표부의 주요 프로젝트인 재정착 프로그램은 지정학적 위기 및 경제·종교적 문제로 이주자들이 모국으로 돌아가거나 거주하는 국가에 머무를 수도 없는 난민 등을 위한 해결책으로 국제적 협력과 책임 분담의 상징적인 정책임.

: 2008년 시작해 현재까지 2만 5천여명의 난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게 지원

### <재정착 프로그램 주요 내용>

- ① 프랑스 대사관 및 영사관과 협력하여 비자 출국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② 재정착 전 의료 관리, 출국 전 난민들의 사전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 제공
- ③ 프랑스에 도착하여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문화강좌 제공
- ④ 프랑스행 항공편 예약 및 공항 이동 지원
- ⑤ 프랑스에 도착한 난민들을 공식적인 정착을 위한 담당 기관에 안전하게 인계

## □ 주요 면담내용

- ☞ 한국은 이민정책에 대해 인구증가 대책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어떠한지?
  - 1세대 이민자들의 출산율이 원주민보다 월등히 높았으나 2~3세대 이민자들의 출산율은 원주민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정도임. 현재 프랑스는 인구절벽의 위기를 해결하는 일환으로 이민정책을 논의하기보다는 그들을 사회에 융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주력하고 있음. 그러나 2050년 정도면 인구절벽에 다다를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 ☞ 이주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은?
  - 3D업종 관련 분야에 노동력이 부족해 이주자들이 주로 종사하며, 2023년 약 15만명 정도의 추가 난민 신청이 있으나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임. 25~30% 정도만 받아들여짐.
- ☞ 프랑스는 다국적 이주자들이 많은데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 사회적인 단점으로는 범죄와 사회불안 등이 있으나 이러한 점들은 국가 경제 침체로 인한 것이지 단지 이민자들의 문제로만으로는 볼 수 없음.

☞ 난민들에 대한 정착지원은 어떤 형태가 있는지?

- 프랑스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성별·연령대 등에 따라 다르나 매달 400~500유로 정도 지원됨(프랑스 국적을 얻을때까지)
- 이들의 정착지에 아이들이 있는 가족과 임산부 여성 등 우선 지원

☞ 국제 이주자들의 사회통합과 관련한 문제로 조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 교류와 이해, 인식 공유 등을 위해 가장 중요한 도구는 언어이므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함. 그러나 프랑스는 이민 2~3세대가 정착하는 단계이다 보니 어느정도 충족되고 있다고 생각함.

☞ 프랑스가 실제로 70년대 출산율 감소시기에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서 인구 정책적으로 효과를 거두었다는 평가가 이민으로 인한 출산율이 증가에 대한 내부평가는 어떠한지?

-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국경 인근 국가들의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오면서 많은 인구증가가 있었음. 이 후 정착기에 인구가 증가했으나,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출산율 감소는 전 세계적인 문제인 것은 같음.

☞ 한국도 최근 난민 재정착으로 미얀마 국적 250명이 들어오는 등 개방의 여지가 있어보이는데 지자체 차원에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 것인지?

- 기존에 거주하는 같은 출신 국가들의 공동체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느정도 강제성을 띤 국가적인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됨.

☞ 이민정책으로 인구가 증가한 사례는 없는지?

-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은 과거 식민지와 언어적인 이점 등으로 과거 노동 이민이 많아 인구가 증가하였음. 또한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난민들이 선호하는 국가가 되었고 사회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들로 인한 인구증가 효과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함.
- 이민과 난민은 다른 개념임. 이민은 돈이 있거나 기술적인 자격을 보유하거나 정치적인 이슈로 망명하는 등의 사례가 많아 현재 프랑스의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음. 한국은 계절적으로 노동을 하러 오는 외국인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들은 돈을 벌러 오는 것이지 살러 오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 인구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됨.

☞ 프랑스 국적의 인종이 다양한데 그들에 대한 차별문제는 없는지?

- 인구통계며 정책적 조사를 실시할 때 인종을 따지지 않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며 인종차별없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방문 결과

- 국제이주기구 프랑스 지부(IOM FRANCE)는 국제 이민과 난민에 대한 정부간 협력을 증진하고, 이주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구로서 1951년 설립되었으며 이민, 난민, 이주 관리와 이주 정책, 이주 인구 통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음.
  - 외국인 유입으로 3D 업종에서 인력난 해소 효과는 있지만 원주민의 부정적인 인식, 유입외국인들의 게토화 현상 등의 문제도 공존하는 상황임.
  - 최근 레바논, 터키, 에티오피아 등 제3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을 수용 중이며,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지원금, 부동산, 취업 등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프랑스는 이민과 난민을 인구정책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인도적 차원으로 접근하며 인구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김.
- ▶ 유입된 외국인들의 게토화 방지 및 자국민화를 위해 지속적인 사회통합 활동이 필요하고 문화적 이해를 통해 사회갈등을 최소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도내 대학, 가족센터 등 외국인의 접근이 용이한 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을 확대·추진하며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임.
  - ▶ 이주 외국인 스스로가 유입된 국가의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기술자 격 취득 등의 자격 교육 지원과 도내 외국인이 다수 근로하고 있는 제조업 등 해당 분야 업무향상을 위한 기술 교육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 방문 사진



국제이주기구 현장면담



관계자 선물증정 - 국제이주기구

### 3

## 이민자 사회복지 및 가족정책 서비스 협회 - ASSFAM

- 방문일정 : 4. 25.(목) 15:00
- 주 소 : 5 Rue Saulnier, 75009 파리
- 홈페이지 : <http://www.assfam.org/>
- 면 담 자 : Ms Celine GUYOT(셀린 기요 ASSFAM 대표)  
Ms Elizabeth HUET(엘라자베스 위에 외국인제도 및 사회복지 분야 전문관)

- 프랑스 대표 사회적기업 Groupe SOS Solidarites 소속 민간단체로 1951년 설립되어 이주민과 그 가족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민자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권리가 존중되도록 각종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 프랑스 사회적기업 SOS그룹은 취약계층을 위해 건강, 노약자 부양, 공동 거주, 교육과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만 1,500여명의 종사자와 600개의 조직으로 유럽에서 가장 큰 사회적기업임. SOS그룹의 매출은 1 조원에 달하며 매년 전 세계 170만명 이상이 도움을 받고 있음.
- 사회통합 관련 공공 및 민간 주체 교육, 이민자 권리 보장 및 대민 홍보, 이민자 개별 법률·행정지원 등을 수행함.
- 내무부 및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이주민들에 대한 체류증 발급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네트워크가 발달했고, 이들이 체류증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언어교육과 일자리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
  - ⇒ 10년 장기 체류증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5년 동안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체류한 기록과 프랑스어 능력 증명이 필요.

## □ 주요 면담내용

☞ 유럽공동체에 속한 나라와 비유럽공동체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차이는?

-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사람들은 체류증 및 통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프랑스에서 체류하고 일할 수 있음. 즉 외국인으로 간주하지 않음. 유럽공동체 회원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오는 이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외국인정책이라고 불리는 것임.
- 예를 들어 독일인이 프랑스에서 6개월 이상 근로활동을 했을 때 소득 신고나 세금을 내는 조세 신고처는 프랑스가 됨. 프랑스에 세금을 내고 프랑스에 소득 신고를 하는 등 의무를 다하면 자녀들도 프랑스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연금도 연계가 돼서 독일에서 근로한 부분도 연계가 됨.

☞ 한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처럼 이주자 지원을 위한 공식 기구가 있는데 프랑스는 이런 기구가 있는지 ASSFAM은 공식적인 기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 프랑스는 공식·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식 기구는 존재하지 않고, 프랑스는 신분증 만드는 기관에서는 신분증만 만들고(문서만), 다음으로 OFII에서 그런 절차들에 필요한 제도를 만들고 수행함. 공식적인 인증 기구라는 개념은 의료계열쪽에는 존재하지만, 이주민들이 법률의 테두리에 들어오게 하고 사회통합에 필요한 언어교육 등 지원과 역할을 하는 공식인증기구라는 개념보다는 자연스럽게 ASSFAM을 비롯한 민간 단체가 주로 수행하는 시스템임.

☞ 이주민이 10년 동안 적응하고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오랜 기간을 체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언어능력과 언어 교육의 습득이 의무화된 부분에서 외국인이 학습 시스템 체계 안에서 살아오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프랑스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소속감과 연대감이 자발적으로 생겨난다고 생각함.
- 또한, 아이들에게 프랑스 학교 시스템에 바로 들어가서 적응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생각함. 아이들의 교육 또한 정착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
- 프랑스 사회와의 교류가 굉장히 중요한데, 프랑스 사회에서는 이제 이주민을 받아주고 환영하는 분위기 등 쌍방 간의 융합이 중요함. 예를 들어, 체류증을 신청하는 절차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프랑스 사회안에 스며드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 민간 단체 차원에서도 정치적 노력(정책적 반영)을 기울이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
  - 정기 비정기적으로 민간사회단체와 SOS그룹 차원에서도 현장에서 느끼고 현장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상황들을 내무부나 입법부에 전달하고 있음.
- ☞ ASSFAM 단체에서 한 해 지원하고 있는 이주민들은 얼마나 되는지?
  - ASSFAM 파리 지부에서는 32명 정도 근무하고 있으며 Ms Elizabeth HUET (엘리자베스 위에)전문관 같은 경우 600건이 넘음.
- ☞ 이주민들이 입국하여 집단을 형성하고 그들만의 공동체가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문제가 생긴다면 해결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지금 프랑스의 경우 외국인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꺼리는 입장임. 하지만 공동체가 있음으로 해서 외국인이 와서 초기 안심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외국인만 모여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막을 수는 없고, 강제해산도 불가능하므로 ‘사회통합’을 오랜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어가는 것임. 특히 자녀들의 교육통합, 부와 빈의 공존, 차별 없는 생활환경이 중요함
- ☞ 프랑스와 한국의 외국인 유입과 관련한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프랑스는 여러 국과 인접해 있고 과거 식민지였던 국가가 많아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유입되는 이주민들이 많으나,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상 섬과 같아 이주민의 유입경로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음. 하지만 중국에는 이주민들을 사회에 포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목표는 같음.
- ☞ 원주민들의 자국민 외의 외국인에 대한 불안과 혐오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 외국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고 그러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역없이 같이 모여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면 차츰 나아질 것이며 오랜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문제임.

## □ 방문 결과

- 프랑스는 출입국사무소의 개념이 없고, 정부와 정부기관, 민간 사회단체에서 난민과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체류증을 예로 들어 이주민들의 체류가 정착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1년 → 2~4년 → 10년 → 국적취득'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회통합과 언어교육에 대한 중요성, 차별없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데 많은 민간사회단체들이 노력하고 있음.
  - 이민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격증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언어가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국어 교육 등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음.
- ▶ 유입된 외국인이 새로운 환경에서 겪게 되는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단체들의 지원을 장려하고 외국인과의 밀접한 소통장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 단기적으로는 농촌과 산업현장에서의 인력 부족 등이 외국인 유입에 대한 장벽을 낮출 필요성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범죄에 대한 우려와 문화적 충돌이 가져올 부작용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 방문 사진



관계자 현장면담



관계자 단체사진

## 4 리옹 지역 가족 협회 연합 - UDAF

- 방문일정 : 4. 26.(금) 15:00
- 주 소 : 12 bis rue Jean-Marie Chavant 69007, Lyon
- 홈페이지 : <https://udaf69.fr/>
- 면 담 자 : Jacqueline Payre(Udaf회장)  
Edith Galland(CAF 사회 및 영토 정책 회장 겸 이사) 등

○ 국가 가족 협회 연합인 UNAF 산하의 Rhone 지역 가족 협회 연합으로 1945년 법률로써 설치되었으며, 지역의 가족 협회 연합은 프랑스 가족정책의 모든 영역에서 공공기관의 조력자 역할을 함.

⇒ 국가 가족 협회 연합(UNAF)은 정부와 직접적으로 가족정책 관련 소통하는 중요 기관

⇒ UDAF69는 론과 리옹 지역의 가족들을 위한 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연합이며, 가족 중재, 아버지의 육아 휴가, 어린아이를 위한 수당,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 부모 지원, 공유 주거 개발 등 지역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리옹 지역 출산율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미혼모 및 비혼 출산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취약한 가족 및 개인에게 일상생활 지원, 양육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자녀에 대한 욕망 - 욕망과 현실 사이 : 오늘날 프랑스에서 자녀를 갖는 것 설문 결과>

※ 프랑스는 1994년~2010년 사이 여성 한명당 1.7명에서 2명으로 출산율이 증가했으나 2014년~2023년 사이 1.7명으로 다시 떨어짐.

- ① 부모의 97%가 아이를 갖고 싶고 이상적인 평균 자녀수는 2.27명
- ② 희망 자녀수가 집계된 출산율보다 훨씬 높음(1.7명에 비해 2.27명)
- ③ 아이를 낳고 싶은 욕구가 실현되기 위한 조건
  - 안정적인 부부관계와 적절한 주거지, 충분한 경제조건, 일과 삶의 균형

## □ 주요 면담내용

- ☞ 일반적으로 경제적 조건이 좋을 때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했는데, 실제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나 시대에 높게 나타남.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문화적 조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빈곤한 시기나 후진국, 종교·문화적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출산율이 높을 수는 있으나 현대에 들어 선진국의 경우 사회문화적인 분위기가 많이 변했고, 진정 가족들이 원하는 출산이 아님.
  - 이상적인 가족 구성원을 이루고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욕구와 실제 출산율의 괴리를 보면 사회문화환경,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인 시기가 되었음.
- ☞ 노동시간이 35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출산율이 올라갔다고 했는데, 기업과의 갈등은 없었는지?
  - 기업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기업도 급감하는 출산율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음을 인지했으며 또한, 이전에는 한국처럼 야근문화가 있었으나 주 35시간 노동이 시행된 1998년 당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법안이었기 때문에 큰 충돌은 없었음.
  - 1945년 기업인 협회에서 가족에 대한 양육 지원금을 지원, 프랑스 기업인들도 가족 정책에 대해 협조를 하고 있음.
- ☞ 프랑스 가족 내에서 가사·육아에 대한 남녀 차이가 있는지?
  - 프랑스에서도 가사와 육아에 대한 분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평균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는 적은 것은 사실임. 가사 노동에 있어서도 성별에 따라 장점이 있는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아직 발전해야함.
- ☞ 한국의 경우 출산을 고려할 때 주택이나 자녀 교육 문제 비중이 큰데 그중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심함.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떠한지?
  - 프랑스의 경우 한국처럼 사교육 과열이 심하지 않고, 국공립 교육은 대부분 무상임. 물론 고급 실기 위주 교육을 하는 학교들은 등록금을 많이 내지만 장학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음.
-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이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노동시간 외 상사의 전화 및 문자 등의 업무지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정착이 많이 되어있음. 노동조합의 활성화와 추가수당 지급이 엄격함.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완전히 뿌리뽑기는 힘드므로 사회적인 합의와 상생의 분위기를 조성하는게 관건일 것임.

## □ 방문 결과

- 출산율이 2010년대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 하락 중. '94~'09년 고용률 상승이 출산율 향상을 견인하였으며, '10년대 이후 경제 위기, 코로나 팬데믹, 가족정책 붕괴(정치적 요인) 등으로 출산율 하락 국면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정책
  - '일-가정'양립 지원 (주35시간 근무제 '98년도 도입)
  - 주거 안정 지원 (주택보조금)
  -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 (무상교육, 유급휴가, 영·유아원 운영, 출산 지원)
- 기업은 어린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업무 부담을 감소하도록 병행
  - 노동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 기업차원에서 장려금 지원 등
- 자녀를 낳고 싶은 욕구와 현실로 나타나는 출산율의 괴리를 통해 건강한 부부들의 출산을 위해 안정적인 부부관계와 주거 조건, 경제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정책적인 제도도 중요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더욱 중요할 것임.
- ▶ **출산율 상승의 주요인은 안정된 직업과 주거, 경제적 지원으로 관련 정책의 강화와 고용주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노력이 필요함.**
- ▶ **출산(자녀를 가지려는 욕구)희망자의 출산·육아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집중 지원이 필요함.(대한민국 희망출산율 : 2명), 비혼출산 제도화는 아직 우리나라 정서상 도입이 힘드나,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와 함께 동등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 □ 방문 사진



현장면담



관계자 단체사진

## 5

## 메트로폴 리옹 - 까레 드 수아 신도시

- 방문일정 : 4. 29.(월) 11:00
- 주 소 : 3 av. des Canuts 69120 Vaiulx-en-Velin
- 홈페이지 : <http://carredesoie.grandlyon.com>
- 면 담 자 : Carre de Soie 프로젝트 홍보책임자  
Sophie Mazet 메트로폴 리옹 국제담당관 등

- 메트로폴 리옹은 리옹시를 포함해 인근 59개 기초자치단체(코뮌)를 포함하여 16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리옹 권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음.
- 리옹 권역은 오랜 산업도시였으나 전통산업(섬유, 화학)의 퇴보로 쇠락의 길에 직면하였으나 중앙정부의 정책에만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인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등을 통해 지역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도시발전 모델을 개척함.
  - ⇒ 리옹 콩플뤼앙스, 손강 수변정비, 리옹 파르-디유 업무지구, 가리발디 거리, 까레 드 수아 지구 등 11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2007년부터 시작된 리옹시 동부 외곽에 신도시를 조성한 사례인 까레 드 수아 지구 조성으로 동서 간 도시 내 균형발전과 서민층 주민의 교통, 상업 등 생활편의를 높이고 공원, 녹지 확충을 통한 주민 삶의 질 개선, 낙후된 양잠산업 단지에 트램 등 대중교통 인프라 유치,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대형 쇼핑센터 및 문화 레저 시설 유치로 새로운 도시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 ⇒ 약 3,600채의 주택과 175,000m<sup>2</sup>의 상업용 부동산 건설, 3개의 새로운 학교, 1개의 상업 센터, 4개의 정원 공원 등

## □ 주요 면담내용

- ☞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증가 효과는 얼마나 되며, 리옹 외 지역에서 유입된 인구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공동화 현상은 없는지?
  - 약 6,500명의 인구가 늘어났으며 7천 개의 일자리 창출, 3개의 학교와 2개의 체육관이 지어졌으며 관계인구는 유입인구의 2배 정도 추정하고 있음.
  - 평균적으로 1/3 은 리옹 구도심에서, 또 1/3은 더 낙후된 동쪽에서, 마지막 1/3은 리옹 인근 도시들에서 옴.
  - 일정 부분 공동화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누군가 들어와서 살수 있도록 도시공간 계획을 하고 있으므로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음.
- ☞ 인구가 모이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섬유산업이 쇠퇴한 후 신도시 조성으로 어떠한 일자리가 창출되었는지?
  - 3차 산업 관련 회사와, 물 관리·폐기물 관리 및 에너지 서비스 사업체인 베올리아, 아데코 등과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한 건물을 쓰는 등 다양한 형태로 창출되고 있음.
- ☞ 민간 투자자가 주로 사업주체가 된다고 했는데, 어떤 혜택이 있는지?
  - 시에서 추진하는 신개발 도시계획 프로젝트이므로 교통의 요충지가 되고 트램이나 지하철이 연결되는 이점이 있음. 예를 들어 주거 용지에 아파트를 하나 지었을 때 교통여건이 확충되면 분양가가 상승하고, 매매가 활발해지는 등의 간접효과를 누릴 수 있음.
- ☞ 한국 같은 경우는 지하철, 주요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설치할 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가능한 사업인데 정부의 지원은 있었는지?
  - 메트로폴 리옹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며, 국가의 지원은 없었음.
  - 프랑스는 교부금이라고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위한 별도의 예산은 아니며, 교부금은 경상 교부금으로 지자체가 알아서 쓰는 예산임.

## □ 방문 결과

- 리옹 권역의 지자체를 하나의 메트로폴로 구성하여 신도시 조성 사업 등 대형 정책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 까레 드 수아 지구 사례의 경우 리옹 메트로폴(Métropole de Lyon)과 볼스-앙-벨랭(Vaulx-en-Velin) 및 빌뢰르반(Villeurbanne) 시가 주도
- 500헥타르 면적의 까레 드 수아 도시 조성사업은 리옹 메트로폴 조직과 지자체와 민간 및 공공행위자(토지 소유자, 기업, 건축가, 개발자 및 투자자, 지역 행위자 및 협회, 주민)간의 공동으로 전개되었음.
  - ⇒ 지방당국은 도시 프로젝트의 주요 원칙을 제시하고 세부 도시 프로젝트 디자인을 수석 도시계획가 및 건축 에이전시를 통해 구체화하며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프로세스를 구축함.
- 그 결과 지구 내 인구유입, 기업과 일자리, 주거지역 개발, 새로운 공공 공간 및 편의시설, 상업지구와 레스토랑 등이 들어서며 지역이 활기를 띠게 됨

▶ 리옹 메트로폴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기 지자체와 갈등도 있지만 합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결국 그 성과가 연계도시에 영향을 미침. 전북특별자치도도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지자체간 도시재생의 협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시군에서 제시하는 상향적 제안으로 배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의 재원을 권역별 배분이나 광역권으로 전환하여 소규모일회성 사업이 아닌 거점 신도시 조성 및 신산업 유치 등 대형 정책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

## □ 방문 사진



현장면담



관계자 단체사진

## IV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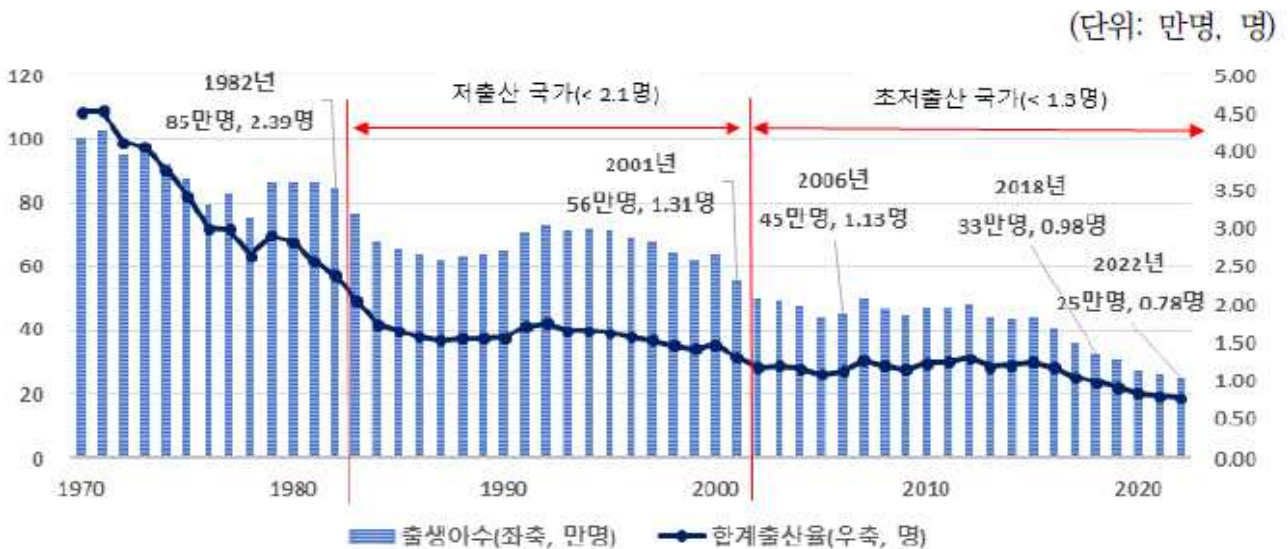
### 1 출산율의 하락은 전세계적인 흐름

- OECD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2.1명을 넘는 나라는 이스라엘 1곳뿐이며 전세계적으로 출산율뿐만 아니라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1982년 2.39명 이후로 1983년부터는 합계출산율 2.1명 미만인 저출산 국가에 속함.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 중반 잠시 반등하였으나 다시 감소하여, 2002년부터는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 2010년대 중반부터 다시 급격하게 감소하여 2023년 기준 0.72명으로 하락하였음.

※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일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추이]



-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합계출산율 평균(약 1.6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

▣ 전북특별자치도 출산율 정책도 지엽적 원인에서 찾기보다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근본적인 대책과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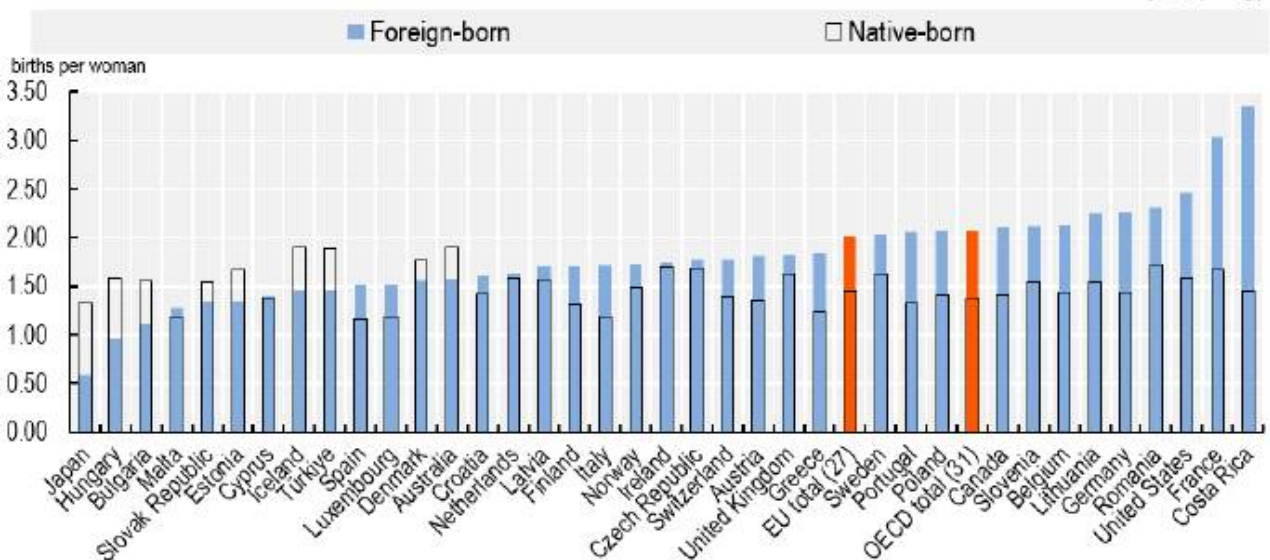
## 2 국가 간 다양한 사회구성원과 정책환경의 차이

- 프랑스 또한 2010년 2.03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최근 출산율 하락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변화된 가치관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그리고 개인권의 신장 등의 이유가 있음.
- 현재 1.8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민자의 비중과 혼외 출생아 비중 등은 합계출산율 급락을 제어하는데 영향을 미침.
  - 우리나라의 총 인구 중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7%로 매우 낮은 수준임. 그러나 OECD 주요 국가들에서는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민자 비중은 OECD 평균 약 10.8%, 프랑스의 경우 약 13.3%에 달함. 이민자는 자국민보다 합계출산율이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점에서 이민자의 비중은 합계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프랑스 자국민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약 1.7명인데 비해 이민자는 약 3.0명

[자국민 및 이민자의 합계출산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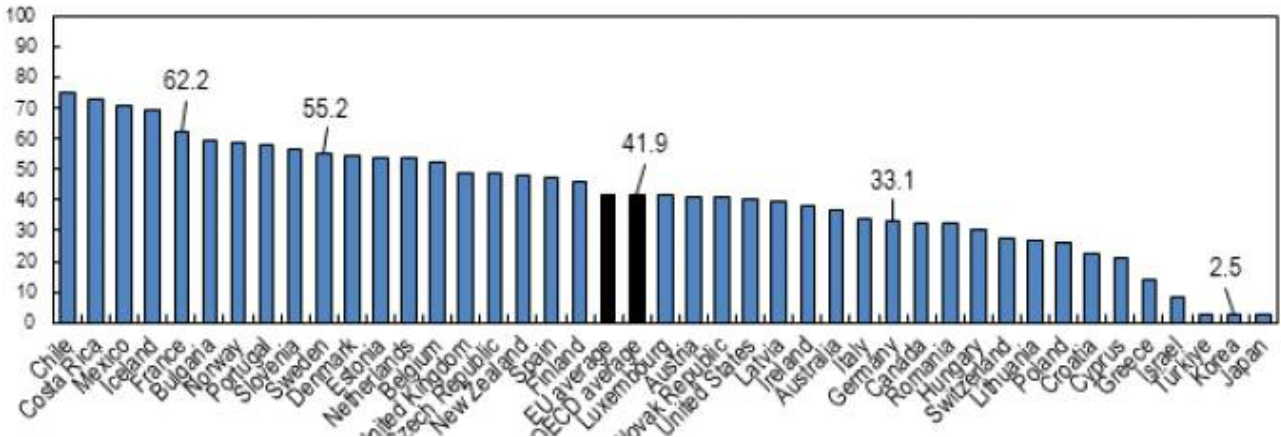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OECD Library, "Composition of immigrant population and households", 2023

- 우리나라의 혼외 출산 비중은 약 2.5%로 매우 낮은 나라에 속함. 반면 프랑스는 약 62%에 달함.

[OECD 국가 혼외출산 비중]



▶ 저출산 위기는 각 나라마다 경제, 역사, 사회·문화, 정책 방향, 그 밖의 대외적 환경 등에 영향을 받아 나타난 결과이므로 명확한 해법이 존재하기 어려우나 그 차이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노력이 필요.

### 3 프랑스 출산 지원정책의 시사점

- 프랑스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두배 이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 출산율 정책 중 우리 도에 시사하는 바는 크게 두가지
  - 첫째,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어느 누구라도 차별받지 않고 출산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프랑스에서는 출생수당, 기초수당, 가족수당, 다자녀 가족 보조금, 아동교육 병행 지원금, 보육서비스 선택 보조금, 가족지원수당, 개학수당 등 다양한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외국인이나 비혼동거 자녀, 하물며 동성부부 입양아까지 차별을 두지 않고 모두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음.

- 둘째,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주 35시간 근로는 사회적 약속으로 철저히 지켜지고 있음.

질문 : 퇴근이후나 주말에 전화나 문자로 업무를 지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답변 : 기업·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편이며, 원칙적으로 수당을 지급 받고 일을 하면 되나 혼한 일은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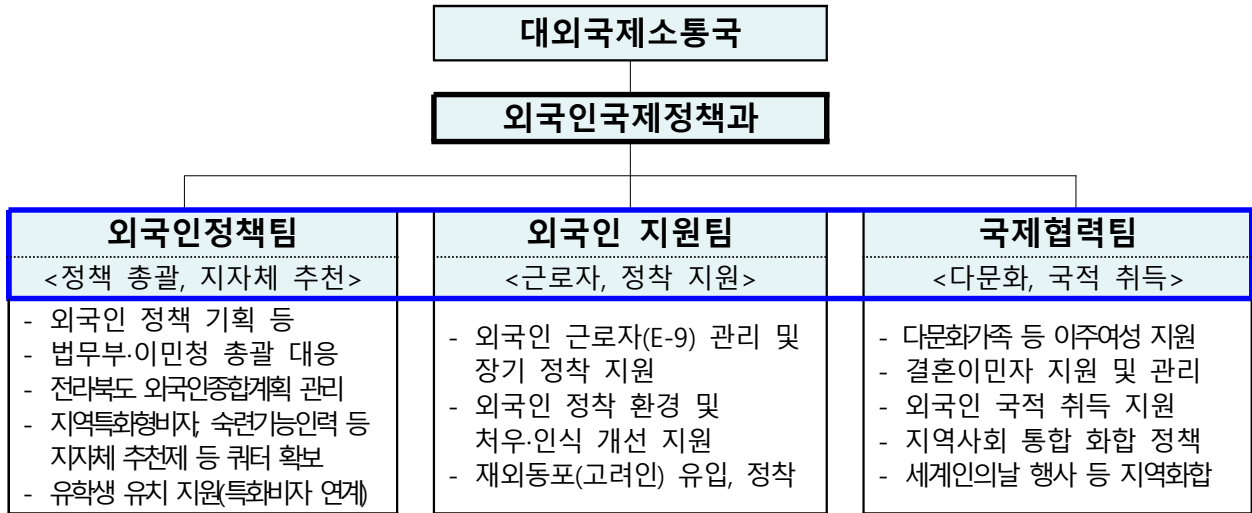
## 4 이민·외국인 정책, 업무 전담 조직 필요

- 프랑스 이민행정의 주관 부처는 내무부이며, 전국에 설치된 산하 기관들이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추진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내무부는 이민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기관이며, 정책 실행을 위한 일선 조직으로 이민 및 통합 사무소(OFIG)와 난민 및 무국적자 보호사무소(OFPRA)를 통해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함.
- 이에 비해, 우리나라 및 지자체의 이민·외국인 정책 추진체계는 그 범위가 외국인 정책(법무부), 외국인 주민 정책(행정안전부), 다문화가족 정책(여성가족부) 등과 같이 부처별로 다르게 담당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전북도 또한 업무의 명확성이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現 외국인 관련 업무·부서 인원 현황]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업무	전담인력(명)
	4개 부서		5명(6명)
전북특별자치도	대외협력과 (국제외국인정책팀)	·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총괄 (F-2-R, E-7-4 등) · 외국인 정착 지원 관련 업무	1
	교육협력추진단 (대학협력팀)	·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 업무	1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팀)	·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	3
	농업정책과 (여성청년농업팀)	· 외국인 계절근로자(E-8) 관련 업무	(1)

- 이에 우리 도는 조직개편을 통해 이민·외국인 정책의 확대 추진과 늘어나는 정책수요 대응을 위해 외국인국제정책과를 신설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

**개편****외국인국제정책과 신설(외국인유치지원 / 외국인정착지원 / 국제협력)**

▶ 주로 정부 권한인 외국인 관련 권한들이 지방에 다수 이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속도감 있는 대응과 전북자치도가 출범한 만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련 특례 발굴이 필요.

## 5 이민·외국인 정책, 결국 언어교육과 사회통합이 중요

- 프랑스 이민·외국인 정책의 변화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① 전후 재건과 경제 호황기에 발생하는 노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유입 시기 ⇨ ② 경기 둔화와 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인한 합법적 노동 이민의 감소 및 중단시기(가족재결합 이민과 장기 불법 이민자 영주권 부여로 이민자는 여전히 증가) ⇨ ③ 이주민 2~3세대들의 소요사태로 인한 '받아들이는' 이민에서 '선택적 이민'으로 개편(프랑스 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 이민자 선별) ⇨ ④ 각종 사회문제로 인한 사회통합에 주력
- 현재 우리 전북도의 경우 농촌지역과 중소기업 등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고자 하며, 지역경제의 활력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유학생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음.
- ⇨ 우리 전북도의 경우 노동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유입시기에 해당하며 체류 기간이 도과한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는 상황임.

-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달리 지리적으로 '섬'에 해당하여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외국인들이 거의 없어 난민 문제가 적으나, 프랑스의 경우 과거 식민지로 지배했던 알제리, 모로코 등지에서 유입된 이민자와 난민들이 많아 외국인 유입경로에 차이가 있음.
- 그러나 결국 이민자건 난민이건 정착 국가에서 적응해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는 것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이민·난민 수용국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것임.

일례로 지속되는 미얀마 내전으로 인해 2015년 미얀마의 카렌족 일부가 '대한민국 제1호 재정착 난민'으로 입국했으며 현재까지 총 9회에 걸쳐 미얀마 재정착 난민 248명을 데려옴. 그러나 이들은 한국어 학습에 한계를 느끼고 상당수 포기해 장소만 한국으로 바뀌었을 뿐 생활여건이 난민촌 시절과 별다를바 없으며 언어 장벽 때문에 적응이 어려운 실정임.

- 프랑스는 공공기관 외에도 민간에서 이민자 및 난민 등을 위한 직업교육과 언어교육을 활발하게 수행 중이며, 프랑스 언어교육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직업교육 등을 활발하게 지원 중
  - 전북도 또한 지난 5월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우리도 내 외국인 근로자에게 생활, 법률, 노무, 체류, 금융, 고충해결 등 통·번역 상담서비스와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반 운영 등을 추진
    - 그러나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접근성과 실질적인 효용이 있을지는 미지수
- ▶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한 정책, 사업 등을 실시할 때 실질적으로 이들의 피부에 와닿을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며, 도움을 요청해야만 움직이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닌 찾아가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
- ▶ 외국인근로자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의 문을 쉽게 두드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언어교육 위주의 민간 단체를 양성·지원하는 것이 필요

## 6

### 광역 주도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

- 프랑스는 여러 차례 거쳐 지방분권 개혁을 추진하여 '메트로폴'이라는 자치단체 간 연합체를 발족함. 리옹 메트로폴은 유일하게 지자체 지위의 메트로폴로 중앙의 권한을 상당수 위임받아 회원 지자체들의 연계·협력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활력과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내 도시재생관련 사업들은 주로 지자체별로 추진되고 있는데 반해 프랑스 리옹은 계획수립과 실행과정에서 주변 도시와 협력 합의하여 도시재생 지역의 선정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메트로폴 리옹 내 지자체 간의 갈등도 있었으나 합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그 성과가 연계되는 장점과 지자체 간 성과를 공유할 수 있었음.

#### ▶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동부권특별회계 등 지방소멸을 위한 다양한 재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광역 차원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예시 : 시군에 배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권역별 배분으로 전환하여 소규모일회성 사업이 아닌 신도시 조성 및 신산업 육성 등 대형 정책사업 중심으로 추진

#### ▶ 우리 도 또한 혁신도시조성으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인구유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입증한 만큼 제2의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 자체의 노력이 필요

## V

# 정책제안 간담 결과

'24. 4. 23.~4. 30. 6박 8일간 실시한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해외 선진지(프랑스) 정책연수를 통해 견학한 우수정책사례를 소개하고, 전북도에 적용가능한 정책방안을 논의

### □ 개 요

- 일 시 : '24. 5. 17.(금) 10:00
- 장 소 : 전북도의회 2층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대상 : 20명 정도(상임위 의원 및 도 관계자)
- 주요내용 : 우수 정책사례 발표, 정책발굴 방향 논의 등

### □ 논의사항

방문기관	연수내용	대 상
파리 국제 기숙사촌(CITE)	- 해외유학생을 위한 국가별 기숙사촌 운영 - 외국인유학생 유치 방향	교육협력추진단
국제이주기구 (IOM)	- 국제이주기구의 역할 및 현 추진과제 청취	대외협력과
이민자 사회복지 및 가족정책 서비스 협회(ASSFAM)	-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각종 지원 사례 청취	대외협력과
리옹지역 가족협회(UDAF)	- 지역의 출산율 제고 정책 및 비혼 출산 지원 등 협회관계자 인터뷰	청년정책과
메트로폴 리옹 까레 드 수아 신도시	- 신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 인구감소 대응사례 청취	정책기획관

## □ 주요 발언 내용

담당부서	주요 내용	연수기관
교육협력 추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유학생 전용 기숙사는 막대한 재원의 소요와 국내학생의 역차별 등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li> <li>● 외국인 유학생 관련 종합적인 대책 마련 검토</li> </ul>	파리국제 기숙사촌
대외협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출신의 외국인들이 국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민자 및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체계적인 언어교육을 위해 찾아가는 공부방 등 계획중임</li> </ul> </li> <li>● 조직개편으로 외국인 국제정책과를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 교육 1번지와, 사회통합에 주력할 계획</li> <li>- 특정국가 사람들이 특정지역에 모이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대신 네트워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li> </ul> </li> </ul>	국제이주 기구
청년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택 등 정책적인 지원이 출산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li> <li>● 프랑스 비혼출산에 관해서는 우리 정서상 장려할 수는 없지만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li> </ul>	리옹지역 가족협회
정책기획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동부권특별회계를 연계하여 균형발전과 인구감소에 대응할수 있는 방안이 필요</li> </ul>	메트로폴 리옹
전북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출산·육아 정책을 추진할 때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점과 결혼형태에 대한 차별이 없는 점이 눈에 띄</li> <li>● 일·가정 양립이 보장되는 문화가 강화되어야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는 야간 근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음.</li> <li>- 주 35시간 근무가 철저히 지켜지고 있음.</li> </ul> </li> <li>● 이민정책이 출산을 증가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출산환경이 중요함.</li> <li>● 이민자와 외국인의 사회통합 정책이 필요</li> <li>● 전북특별자치도 광역권 차원에서의 도시재생사업 등 계획이 필요</li> </ul>	총괄


## □ 참석자 명부

소속	성명	직위	역할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	좌장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부위원장	사례발표 및 토론
행정자치위원회	염영선	위원	"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위원	"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숙	위원	"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	위원	"
정책기획관	민선식	국장	"
	유성석	주무관	"
교육협력추진단	정광모	과장	"
	윤동일	주무관	"
청년정책과	송주하	과장	"
	정후락	주무관	"
대외협력과	주영환	과장	"
	변재선	주무관	"
전북연구원	김동영	연구위원	"

## □ 간담회 사진



## □ 현지 보도자료




## COMMUNIQUÉ DE PRESSE

Lyon, le 30 avril 2024

### L'Udaf 69 reçoit une délégation coréenne pour échanger autour de la politique nataliste française

Vendredi 26 avril 2024 après-midi, le siège de l'Udaf du Rhône et de la Métropole de Lyon a eu le plaisir d'accueillir une délégation d'une quinzaine de fonctionnaires de la ville de Jeon Buk en Corée du Sud. **L'objectif de cette réunion : explorer la politique nataliste mise en place dans notre pays.**

La réunion a été honorée par la présence de Mesdames Edith Galland et Sandrine Rouillet, respectivement Présidente et Directrice des politiques sociales et territoriales de la 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CAF) du Rhône. La Mutualité Sociale Agricole (MSA), et les associations membres de l'Udaf 69, telles que Jumeaux & Plus, Mono-parenthèse, Fa-milles en Mouvement, la Confédération Syndicale des Familles (CSF), l'Association des Paralysés de France (APF), l'Association Familiale Catholique du Rhône (AFC 69), l'Association Familiale Protestante (AFP) ainsi que l'Association des Familles de Neuville-sur-Saône étaient également à nos côtés.



Madame Jacqueline PAYRE, Présidente de l'Udaf 69, a débuté la rencontre en présentant les résultats de l'enquête intitulée « **Désir d'enfant(s) – Entre désir et réalités : avoir des enfants aujourd'hui en France** », réalisée par l'Union Nationale des Associations Familiales (UNAF), tête de réseau de l'Udaf 69. **Cette présentation a permis de mettre en lumière les aspirations et les obstacles rencontrés par les couples français en matière de parentalité.**

Par la suite, la Présidente de la CAF du Rhône, **Madame Galland, a exposé les divers aides disponibles pour les parents et futurs parents**, enrichissant ainsi les échanges autour des politiques familiales.

L'Udaf 69 tient à renouveler sa profonde gratitude envers la CAF du Rhône ainsi que toutes les associations membres pour leur participation active à cette rencontre passionnante.

**À PROPOS DE L'UDAF 69**

L'Union Départementale des Associations Familiales du Rhône (Udaf 69) est une organisation qui œuvre pour la défense des intérêts des familles et la promotion de la politique familiale dans le département du Rhône et la Métropole de Lyon.

**Contact presse - Victoria DODART : [v.dodart@udaf-rhone.fr](mailto:v.dodart@udaf-rhone.fr)**

Udaf du Rhône et de la Métropole de Lyon - 12 bis rue Jean-Marie Chavant - 69007 LYON  
Tél : 04.72.76.12.00 / [www.udaf69.fr](http://www.udaf69.fr)

## Udaf 69는 프랑스의 친(親)출생주의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 대표단을 맞이합니다.

by udaf69 | 2024년 5월 3일 | 분류되지 않은 | 0 코멘트

### ACCEUIL D'UNE DÉLÉGATION SUD-CORÉENNE



2024년 4월 26일 금요일 오후, Udaf du Rhône과 Métropole de Lyon의 본부는 한국의 전북시에서 온 약 15명의 공무원 대표단을 환영하는 기쁨을 가졌습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친출생주의 정책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 회의에는 [Rhône Family Allowances Fund \(CAF\)](#)의 사회 및 영토 정책 회장 겸 이사인 **Edith Galland** 여사와 **Sandrine Rouillet** 여사가 참석하여 영광을 누렸습니다. [Mutualité Sociale Agricole \(MSA\)](#) 및 [Jumeaux & Plus](#), [Monoparenthèse](#), [Familles en Mouvement](#), [Trade Union Confederation of Families \(CSF\)](#), [Association des Paralysés de France \(APF\)](#), [Catholic Family Association of the Rhône \(AFC 69\)](#), [Protestant Family Association](#)과 같은 Udaf 69의 회원 협회 (AFP 리옹)과 누빌 쉬르 손(Neuville-sur-Saône) 가족 협회도 우리 편에 섰다.

Udaf 69의 회장인 Jacqueline PAYRE 여사는 Udaf 69 네트워크의 책임자인 전국 가족 협회 연합(UNAF)이 실시한 **"자녀에 대한 욕망 - 욕망과 현실 사이: 오늘날 프랑스에서 자녀를 갖는 것"**이라는 제목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발표는 부모가 되는 측면에서 프랑스 부부가 직면한 열망과 장애물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CAF du Rhône의 회장인 **Galland** 여사는 부모와 미래의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보조 자료를 제시하여 가족 정책에 대한 교류를 풍부하게 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이처럼 다양한 협회가 대표하는 가족들의 관심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 2023년 Udaf 69에는 93개의 회원 협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재정 지원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생산적인 토론을 촉발시켰습니다. 프랑스 모델에 대한 이러한 매력은 특히 주택, 예산 관리 및 건강과 같은 현재 문제에 대해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의를 표하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Udaf 69는 이 흥미진진한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CAF와 모든 회원 협회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 □ 국내 보도자료

全北日報

2024년 5월 2일 목요일 011면 오피니언

# 파리의 러너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6명의 의원들이 인구 감소 대응 및 이민·외국인 정책에 관한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프랑스 파리와 리옹 등을 방문했다.

“오메~ 파리가 그냥 파리가 아니네...” 연수 내내 방귀로다가 필자를 증독시킨 룸메이트 김정수 도의원의 갑탄사다. 서울 면적의 1/6, 인구의 1/5밖에 안되는 파리는 ‘세계의 문화 수도’라는 말이 결코 수사가 아니었다.

나폴레옹 3세가 오스만 남작을 기용해 예루살렘 개편을 중심으로 개조한 파리는 제국의 중심이자 공화국의 수도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무엇보다 필자를 놀라게 한 건 고층빌딩이 없다는 것이다. 100년 이상 된 대리석 건물들은 5층 내외로 높이가 일정하며 지붕은 45도 기울어져 있었다. ‘문화=역사’라는 등식은 파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난민이든 이민이든 자국민과의 사회적 통합이 중요한데 파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국제이주기구(IOM)와 이민자 사회복지 및 가족정책 서비스협회(ASSFAM)를 방문한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외국인 정책을 논의했다.

이는 메이지유신 이후 선진문명을 배우고자 유럽과 미국 등을 방문한 이도 히로부미를 비롯한 일본의 ‘이와쿠라 사절단’의 재현이다.

“어때~ 이런 세상이 있는 줄 알았다면 진짜 파리로 유학왔을 판이다...” 프랑스 파리 국제 기숙사촌(CITE)을 방문한 김정수 도의원의 김동이다. 1920년에 세계 최초로 설립된

의정단상



염영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대변인

“

프랑스 대혁명으로 시민의식 발현  
동학농민혁명은 민족운동의 근간  
기념사업지원 조례 보류돼 아쉬워

”

CITE는 40여개국의 기숙사가 모여있으며, 2018년 한국관도 건립되었다. 이는 프랑스 유학생들 간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인류복지와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폴레랑스의 진면목이 아닐 수 없다.

“출산율을 높이는 근간으로 노동시간 주 35시간 단축, 인정한 일자리 제공, 양육과 교육의 무상지원을 말씀하셨다. 우리 한국은 주 52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고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69시간으로 늘리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런 식으로 세계 최고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나요?”라고 오현숙 의원님이 리옹지역 가족협회(UDAF)에 질의하자 관계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었다.

정치란 모름지기 시대정신의 실천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인구문제 해결과 지역 균형 발전이다.

“굳이 기업유치를 얹더라도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자연환경으로 얼마든지 주민 소득을 높일 수 있고 인구감소를 줄일 수 있다.” 탄광과 견직물 도시였으나 예술 도시로 탈바꿈한 생티에엔과 알프스 산으로 둘러싸인 관광도시 안시를 둘러본 강대창 도의원의 자신감이다.

파리 뿐만 아니라 안시에 이르는 프랑스는 비옥한 토양과 천혜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 그야말로 젓과 꿀이 흐르는 축복받은 나라다. 이 대국을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은 역사에 대한 자긍심이다. 그거저는 프랑스 대혁명을 통한 시민의식의 발현이 아닐까.

동학농민혁명은 민족민주운동의 백두대간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그 본산이자 성지다. 이런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전북 부흥의 저력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필자가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에서 보류되었다. 전남과 광주, 충남과 경남에는 이미 제정되었다. 부끄럽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교레~ 교레” 필자를 비롯한 연수팀 러너들이 센강 주변과 론강을 조감하면서 듣는 한류 바람이다. ‘센강은 좌우를 가르고 한강은 남북을 나눈다’는 어느 저자의 자유의지 소산이 아닐까?